

# 기후변화협약 제4차 당사국 총회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기후변화협약 제4차 당사국 총회가 열렸다. 이번총회에서는 개도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의 무의 참여와 교토의정서 이행방안등이 논의되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 및 선진국 간의 입장차이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이번총회에서 논의된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의무 참여와 부에노스 행동계획등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편집부>

## 1. 기후변화협약 제4차 당사국 총회 개요

- 오오키(일본) 제3차 당사국총회 의장의 개회 선언 및 발언
- 산림의 흡수원과 관련된 IPCC 특별보고서를 2000년까지 마련할 것을 제안

## 2.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비준현황

- 현재 174개국과 1개 지역경제협력체(EU)가 기후변화협약에 비준하였으며, 59개국이 교토의 정서에 서명하고 이중 1개국(피지)이 비준함

## 3. 의사규칙 채택

- 지금까지 당사국총회에서 의사규칙을 채택치 못함에 따라, 42조(투표)를 제외한 잠정의사규칙을 적용키로 결정

## 4. 의제 채택

- 비부속서 I 국가의 자발적인 공약에 관한 의제는 중국과 G-77의 강력한 반대로 공식의제에서 제외되었으며, 의장은 관심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총회 기간중 비공식 협회를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비공식 협의를 개시하는 것을 지지함
- 사우디, 쿠웨이트 등 산유국은 기후변화로 인해 악영향을 받는 국가들에 대한 재정지원, 보험 등

을 포함하는 의제를 별도로 추가할 것을 강력히 주장, 의장은 의제48 및 49에 이를 포함하는 선에서 타협하였다.

## 5. 의장단 선출

금번 당사국 총회의 7개 부의장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조지아, 노르웨이, 덴마크, 마살군도, 감비아, 안티구아 바베도스가 선출됨

## 6. 제4차 당사국 총회 의장 연설 관련

11. 3일 첫날 제4차 당사국 총회의장으로 아르헨티나 자연자원 및 지속개발부 장관 Ms. Maria Julia Alsogaray 의장 선출되었으며, 이날 의장은 연설에서 아르헨티나는 기후변화에서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 국가는 아니지만 앞으로 의무부담에 동참할 의향이 있음을 밝히고 개도국들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책임을 분담할 윤리적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회의 첫날 중국과 다른 개발 도상국들은 개최국 아르헨티나가 제안한 지구 온난화 대책의 강화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들 사이에서 불거진 이 반대로 인해 아르헨티나는 빈곤국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방출 제한에 대한 의제를 철저히 야만 했고, 그러나 아르헨티나 출신 의장은 자발적 감축에 관해 관심을 지닌 국가들 간에 비공식적인 모임을 주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7. 개도국 및 G-77의 입장

중국과 77개 G-77 들중 거의 모든 국가들은 공해물질의 대부분을 방출하고 있으며 공해산업을 바탕으로 부를 일꾼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대표단의 한 고위간부는 의장이 너무 편파적이라고 강력 비난했으며, 각 국가의 사정을 감안하는 경우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며 중국이 중진국 수준으로 분류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온실가스감축 노력도 중국으로서는 기울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에노스아이레스 회의는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에서 이루어진 최선진국들 사이의 협약, 즉 그들 각 국가의 가스방출량을 201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 아래로 감축한다는 선언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미국은 교토협약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선 개발도상국의 '의미있는' 참여가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특히 한국을 비롯한 멕시코, 터키 등은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해도 좋을 만큼 충분히 선진화되었다고 말한다.

전세계 이산화탄소 방출량의 25%를 배출하고 있는 미국의 비준은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이는 교토협약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1990년을 기준으로 산업국가들의 전체 이산화탄소량 배출량 중 최소한 55%에 대해 선진국가국가들의 비준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인 브라질의 경우 아르헨티나의 자발적인 감축노력을 환영하지만 자국은 정작 그러한 시도를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8. 배출가스 거래에 대한 찬반

지난해 12월 교토에서도 개발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관한 논쟁이 매우 거세었으며, 따라서 당시 의장은 토론주제를 바꿔야만 했었는데, 이번의 회의도 곧 다른 논쟁분야로 주제를 옮겨야했다. 미국,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강대국들은 부유한 국가들이 빈곤한 국가들의 배출량 감축에 대한 보상

으로 일정액을 지불함으로써 그만큼 교토협약의 목표치에서 여유를 가지려고 하고 있으며, 그러나 유럽연합(EU)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이와같은 의도는 자국내에서의 가스방출량 감축을 회피하려는 '기후에 관한 사기행위'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소위 배기가스거래(emission trade)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 9.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 채택

선진국이 주장하는 신축성 체제 운영방안 마련과 개도국 관심사항인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재정지원, 개도국 보상 등을 2000년까지 함께 완료키로 합의하고 구체적 작업계획을 확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문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강력하고 광범위한 규제조치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기술이전문제, 신축성체제 특히, 청정개발체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규칙을 제정, 배추권거래의 보조성, 양적 및 질적 상한선 설정등임

## 10. 우리나라의 입장표명

정부대표로 참석한 최재욱 환경부장관은 대표연설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대해서는 기본정신인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원칙과 "개별국가의 사회경제적 상황 고려"원칙 하에 2008년부터 의무를 부담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과도기 적응기간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구속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그 이전 기간에는 자발적인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할 것임을 표명하고 신축성 체제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환경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메카니즘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과,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이들 메카니즘에 대한 향후 작업계획에 합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청정개발체제(CDM)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의무이행의 수단일 뿐아니라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할 계획이며, CDM을 통한 개도국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CDM에 한도설정의 반대를 표명했다.

## 11. 정부, 기업계 및 전문가들의 향후 전망 및 대책

### ▶ 선진국의 압력증대

지난 13일 폐막된 제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감축 의무국으로 지정은 피했지만 향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잦은 기상재해로 온실가스 감축이 세계적인 현안으로 등장함에 따라 세계 12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가인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감축 의무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부터 2017년까지는 자율 규제기간으로 하고 2018년부터 온실가스 증가의 입장을 내놓았지만 2012년까지 90년수준의 5%이상을 줄이기로 한 미국 등 선진국의 압력으로 시한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LG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이 되든, 자발적 참여국이 되든간에 오는 2020년까지 상당폭의 GDP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만약 2010년부터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할 경우 우리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질을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는 2020년에 가서도 지난 90년대 초반의 경제규모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 ▶ 배출거래제 도입 관련

이산화탄소의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화력발전 생산량은 급감하는 반면, 원자력발전량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거래제는 지역내 환경총량을 고려해 사업장별로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허용량과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출총량을 관리하면서도 기업들에게 배출 감축수단을 자율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달 27일 환경부가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개최

한 '배출권거래제 전문가 토론회'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경엽 선임연구원은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화석연료의 가격을 올려 전력산업이 화력에서 원자력과 수력발전으로 대체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2020년 국내 전력산업의 생산량은 95년 대비 1.7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원자력과 수력발전은 2020년에 95년보다 57% 증가하는 반면 화력과 자가발전은 54% 정도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배출권거래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석유산업의 생산량은 2020년에 95년보다 2배로 증가할 것이지만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보다 40-50%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에 개도국의 참여 압력이 가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배출권거래제 등 협약이행수단에 대한 자발적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이날 환경부 고윤화 대기정책과장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오염물질 배출량의 통계 자체가 정확히 나오지 않는 등 시행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고 밝히고 『발전소의 아황산가스만을 대상으로 1~2년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 향후 대책

기후변화협약은 IMF위기이후에 또다른 경기침체로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어 정부와 기업들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있다. 향후 협상과정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내놓음으로써 유리한 위치를 확보함은 물론, 우리 산업을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태양력, 풍력 등 무공해 재생에너지 개발 등에도 연구개발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하며, 또 자발적협약을 통해 기업들의 자율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산업체를 육성하고 에너지전문절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